전주·완주 '동반성장' 협력 방안 제안

민주 안호영 의원, "전북의 갈등 해소, 이재명정부의 힘 전북발전으로 연결하겠다"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간 협력 추진 제시… "협력·공존 새 길 여는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갈등을 넘어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전북 특별자치도 곳곳이 갈등의 지뢰밭이 됐다"며 "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군산·김제 갈등, 전주·완주 행정통합으로 인한 충돌이 전북의 성장축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북 정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전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힘을 전북 발전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권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은 전주와 완주가 '동반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간의 실질 협력 추진을 제시하며,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주와 완주가 함께 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11월 23일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의 회동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기구' 구성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은 그 실천적 행보의 일환이다. 오늘도 기자회견 전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함께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관련 실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5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1차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 지난 5일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에서 '제1회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10일 상하이서 투자유치 활동 나선다

8~12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8~12일 주요 일정과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북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도정 주요 일정을 밝혔다.

8일 오전에는 합동간부회의를 통해 실국 및 출연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와의 간담회 및 물품기탁식이 열린다. 이날 도내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할 5천만원 상당의 한우고기가 기증될 예정이다.

이어 안전문화 확산과 민관 협력 증진을 위한 2025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간협력기관 우수사례 보고회가 진행되며, 우수 활동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함께 이뤄진다.

9일에는 2025년 전북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전북도 민원실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지금까지 전국 129개 기관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으며, 광역자치단체는 11개, 기초자치단체는 109개다. 전북에서는 도 본청을 포함해 군산·남원·정읍·완주 등 5개 기관이 명단에 올랐다.

10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유망 기후테크 해외 스타트업 컴업(COMEUP) 행사'에 전북도 기업들이 참가하며, 도는 전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북도 대표단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대표단은 현지 투자펀드 운영사인 중찬그룹과 업무협약, 전북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도청 공연장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왕중왕전'이 개최된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8~12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2025 행감 우수의원상 시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장연국 대표의원)는 지난 5일, 20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최형열(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권요안(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임종명(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박정규(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 강동화(교육위원회) 의원을 선정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수상자 최형열 의원(기행위, 전주 5)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교통단속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교육감사 전문인력 연속성 유지 방안, 감사 직렬 도입, 외부 전문가 임기제 채용 방안 검토 등 정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권요안(농복환위, 완주2) 의원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제도 목적과 지급대상 차이에 대한 혼선 해소, 국비 비율 상향,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아열대과수 등 고소득품목 교육 다양화, 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인 교육운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종명(경산건위, 남원2) 의원은 △사회적 기업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여건 개선 철저한 점검, △친환경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관련 공모과정 점검 및 내실 있는 운영 등을 요청했다.

박정규(문안위, 임실) 의원은 △전주천보다 낮은 침수 우려 지역 우수저류시설 확충, 비상시 생활용수나 진화용수 활용 방안 모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소관 개막작 '심청' 출연 아동 정당한 보상 지급과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강동화(교육위, 전주8) 의원은 △교육발전 특구 특별교부금 사용 시 시설비보다 아이들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 검토 요구, △식중독 사고 예방 연수 강화 등 대책 마련 요구,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사업, AI 시대에 맞는 새홈페이지 구축 필요 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2027년 예산 대응 국책사업 발굴 체계 조기 가동

도, 킥오프 회의 열고 분야별 발굴 방향 공유… 올해 '발굴 초안 사전보고' 절차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2027년 국가예산 편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조기 가동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야별 발굴 방향을 공유하며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통상 3~11월에 진행해오던 발굴체계를 4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11월부터 조기 가동해 왔다. 이는 연초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내년 5월 본격화될 '27년 국가예산 편성 흐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정책 사이클보다 먼저 움직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미래 신산업, 농생명, 문화, 관광, 새만금, SOC, 환경복지 등 7개 분과가 국정과제 연계 분석과 신규 발굴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핵심 전략 분야 중심의 정밀한 발굴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발굴 초안 사전보고' 절차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분과별 1차 아이템 초안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 정책성·경제성 검토를 거쳐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한다.

전북도는 초안 사전보고, 전문가 검증, 중간보고, 최종확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굴체계를 마련해 사업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123개를 정밀 분석해 전북형 전략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동시에 전국 공모형·경쟁형 사업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국가예산 1조2747억원 확보

민주 신영대 의원 "시민 체감 신규사업 예산 확보 주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5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군산시 국가 예산 1조 2,74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동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 5년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을 지킨 예산으로 의의가 깊다"고 말했다.

군산의 신규사업은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철길숲 조성 등 23건으로 1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41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1조2,57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의 분야별로는 신산업 및 R&D분야가 5건으로 63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가 4건으로 8.2억원, SOC 및 정주여건 개선 분야가 15건으로 114.3억원이다.

계속사업의 분야별 예산은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17건 575.4억원, 교육분야 9건 168.2억원 재난·안전 분야 10건 128억원, 일자리 및 지역경제 분야 4건, 46.7억원, 주민편익 및 도시재생 분야 11건 829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18건 111.4억원, 농림·해양수산 관련 분야 56건 2,945.6억원, 환경·복지 분야 113건 5,520.8억원, 새만금 SOC 및 주요사업 분야 7건 3,984억원이다.

특히, 신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281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0.8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20억원 △군산 철길숲 확대 조성 3억원 △새만금 신항만 715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150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186억원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10억원 등 시민들의 의료, 편의 시설과 군산 발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다.

국회 단계에서는 △특송화물 통관시설 확대 6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15억원, △새만금 신항 항로준설 10억원, △CCU기술 고도화 사업 12.25억원이 증액되었다.

신영대 의원은 "작년엔 12.3 내란으로 증액 없이 예산이 통과되어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며,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전북 송전탑 갈등, 국가에너지전환 관점서 해법 모색

민주 안호영 의원, 오늘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전북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전역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송전선로 갈등을 국가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12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주목된다.

대통령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에서 송전탑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호영 의원은 타운홀 미팅에서 보다 진전된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에너지 정의, 지역 산업전략,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 지산지소에 따라 장거리 송전 의존을 완화할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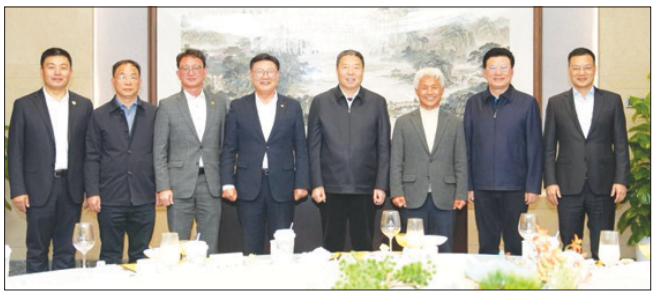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의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발표에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전북대 오창환 교수를 비롯해 정부·지자체·주민·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이 더 이상 송전탑 갈등의 피해지역이 아니라 국가에너지전환의 해법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데이터센터·AI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의 미래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의 송전망 문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반도체·AI·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결해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도의회-후난성 간 우호협력 방안·협력의제 논의

도의회 대표단, 중국 후난성 일원 방문… 주요 성공모델 시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의 공식 초청에 따라 문승우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후난성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후난성 정협 모만춘(毛万春) 주석이 문승우 의장단에게 직접 공식 초청장을 송부하며 성사된 것으로, 양 지역 간 우호 협력의 폭을 넓히고 공고한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당면 과제인 '메가시티 광역 통합',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지역 인재 육성' 등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후난성의 주요 성공 모델을 집중적으로 시찰했다.

주요 시찰을 통해 지역 간 연계 발전 전략과 산업 구조 고도화 방식, 연구·교육·기업 간 연계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형 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후난성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책 해법을 찾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